

이덕일의 '역사의 창'



다음 대통령의 역사관

필자가 꼽는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역사관이다. 사실 이것은 세삼스러울 것도 없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도자라면 자국 역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 TV 카메라가 연희동 사저 안의 서재를 비춘 적이 있었다. 그때 서재 벽면에 필자 등이 쓴 '고조선은 대륙의 지도자였다'라는 책에서 부록으로 제공한 고조선 강역 지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역사의 첫 뿌리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확신을 가졌다.

시회였다. 우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혼수(本性)라는 일본식 용어를 쓴 것부터 우연은 아니었다. 전시 설명문에 "369년 가야 7국(비사벌,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백제·왜 연합의 공격을 받음(서기)"이라고 썼다. 여기서 서기는 일본 극우파들의 경전인 '일본서기'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서기 369년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이른바 임나 7국을 세워서 562년까지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논리를 국립 중앙박물관이 버젓이 선전하고 있었다.

다. 가야사 복원 차원에서 가야 고분군을 등재하려면 서기 1세기 유적부터 신청해야 하지만 5~6세기 유적만 집중적으로 신청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가야는 1세기에 건국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본인 식민 사학자들과 한국인 강단사학자들은 가야가 3세기 후반에 건국되었다고 우기고 있으므로 5-6세기 유적만 집중적으로 신청한 것이었다. 게다가 경남 합천의 옥전고분군을 임나 7국 중의 하나인 다라국 고분으로 신청하고, 전북 남원의 두라리 고분군을 '일본서기'에 왜왕이 소유한 것으로 나오는 기문국 유적이라고 신청했다. 그래서 남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항의하고 있는 중인데, 관련 당국은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왕가의 발상지라는 큐슈의 미야자키(宮崎)현 사이토바루(西都原) 유적에서는 고령 지산동의 가야 철모와 똑같은 철모가 출토되었다. 가야계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 일 왕가를 세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유물이다. 그러나 '가야본성' 전에서는 "남해안 일대 연안 항로의 요충지를 따라서 왜와 관련되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가라국의 귀족이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라고 왜(倭)가 고대부터 남해안 일대를 지배했던 것처럼 왜곡해 놓았다. 당초 '가야본성'전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 극우파들에게 축배를 들게 할 예정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항의로 일본 전시가 중단된 것이 다행이라던 다행이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역사관이 다. 그 역사관이란 말할 것도 없이 단재 신재호로 대표되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 나라 대학 사학과 중에 백암 박은식, 석주 이상룡, 단재 신재호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현실이 가야사 복원이 왜 임나일본부 복원으로 왜곡되고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차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이 나라 국민의 상식적 역사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지하의 수많은 순국선열들과 मिल어 마지않는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양악 수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임성훈 조선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상인 경우가 많아서 아래턱의 편악 수술만으로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다. 약 15년 전, 한국에서만 양악 수술 붐이 일어났을 때, 안모(얼굴 생김새)가 양호하고 치아의 맞물림이 좋든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심미적인 개선을 얻고자 양악 수술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급증해서 늘랐었다. 이때 때 신문사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투고하였으나, 신문사의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게재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험이 축적되면서 편악 수술 시에는 재발이 더 많이 된다는 사실과 양악 수술을 통해서 위턱의 뒤쪽을 들어 올리면 재발을 줄일 수 있고, 이때 턱이 회전되면서 턱선이 더 가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양악 수술이 악교정 수술의 주된 수술법이 된 이유이다.

당시에는 양악 수술 광고가 범람하던 시기였다. 이후 양악 수술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악교정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무분별한 양악 수술의 범람이 악교정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키운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에 따라 과잉 수술 쪽에 치우쳐져 있었던 균형추가 지금은 수술 거부 쪽으로 환원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위턱 뒤쪽에는 큰 혈관이 많기 때문에 심한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심하게 붓는 경우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다. 양악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5% 정도이지만, 아래턱의 편악 수술 시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에는 위턱의 뒤쪽을 들어 올리는 수술은 교정 치료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교정 치료 시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위턱 어금니들을 상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아래턱 편악 수술만으로도 양악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악교정 수술과 교정 치료를 모두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과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턱의 문제가 콤플렉스가 되는 경우라면 악교정 수술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는 양악 수술이 아닌 편악 수술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치의학의 역사에서 양악 수술만큼이나 미디어의 영향에 따라 급격한 부침을 겪은 치료법도 없을 것

기고

'디지털 국토' 구축의 시작, 지적 재조사



박해달 무안군 지적재조사팀장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사업 이후 도면 재작성, 1960년대 야산 개발 사업 당시 지적 공부 등록 오류, 1970년대 세마을사업 지적 공부 미정리, 2000년대 종이 도면의 스캔 전산화 등을 거치며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자'의 원인이 되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 국토의 15%(554만 필지)가 지적 불부합자이다.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무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연결, 즉 다른 기술과의 접목이 중요한 시대다. 지적 재조사는 점과 선을 연결한 2차원 종이 도면의 한계를 뛰어넘어 GPS 좌표 등 등록되는 디지털 지적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간 정보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기술들과 융합 활용이 가능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일제 잔재 청산은 물론 지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GPS를 활용한 고정밀의 측량 기술로 새로운 디지털 지적도를 그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그러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 분쟁이 해소되면서 소송 및 토지 경제 측량 비용 등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효과는 차치하고 필자는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미래를 살아갈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마모된 종이 도면으로 만들어져 실제와 맞지도 않는 지적도와 토지를 물려주고 분쟁과 대립까지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비약적인 사례일지 모르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이웃과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인 다툼을 넘어 물리적인 다툼으로 인한 인명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 개인 간에는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었던 면적이 작은 대지와 건물이 인접 토지와 저축된 경우에 상호 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땅에 개설된 도로 또는 내가 국공유지 도로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적 재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의 국토를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작업이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 발전된 문화와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없는 반듯하고 가치 있는 바른 땅을 다시 그려서 물려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지적 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적 불부합을 해소함으로써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들에게 지적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반듯하게 바로잡아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이용

社說

李 '원팀' 대 尹 '홀로서기' 대선판 요동친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결국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를 선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원팀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내용이 절정에 다다른 상황에서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광주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민주 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믿는다"며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지지기반이자 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손을 맞잡고 통합과 포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윤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체 및 재구성을 발표하며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가 밝힌 선대위 해산 구상은 총괄·상임·공동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조직을 다 허물고, 백지상태에서 실무형 '초슬림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가 '단기필마'로 홀로서는 길을 택한 것은 김 위원장 및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리더십과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반동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의 행보에는 진영 결집의 효과를 극대화해 지지율 역전의 흐름을 굳히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요동치는 대선 구도에서 여론은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 줄지 주목된다.

5·18 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최대한 보존을

광주시가 최근 실시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 '옛 적십자병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가 나왔다. 본관동과 별관·창고·영안실 등은 안전등급 D등급(미흡), گیا보호소는 E등급(불량)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 작업과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나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에 따라 건물 활용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일반 건물이라면 대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안전 등급이다. 하지만 옛 적십자병원은 1980년 5월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공수부대에 의해 다진 시민들의 치료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이 이뤄진 곳이다. 함부로 헐어 버릴 수 없는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품고 있다. 광주시는 '원형 보존'(1안)과 '보수·보강'(2안)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에 5·18 기념사업위원회 심의 결과

그동안 광주는 옛 전남도청 본관과 전일빌딩 등 5·18 사적지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구조 보강을 하며 변형된 옛 전남도청 내 공간은 현재 복원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칫 헐릴 뻔했던 전일빌딩은 계엄군의 기총소사를 입증할 수 있는 탄흔이 발견되면서 '전일빌딩 245'로 새롭게 변모했다. 반면 전일빌딩 뒤편에 있었던 YWCA 건물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1983년 철거돼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YWCA 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5·18 사적지인 옛 적십자병원 건물을 원형에 가깝게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5·18단체들과 시민들의 중의(衆議)를 모아 후세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TV로만 봤던 도올 김용옥 선생을 만난 것은 몇 년 전이었다. 어머니가 시집과 살았던 해남 가학산에 '전남 인재 학당'을 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서울 혜화동 거처를 찾아가 맞절을 한 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도올은 자신이 '전남인'이라면서 전남 발전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된다"는 지론을 펴며 "전남인이라고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국토의 지킴이라는 공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지난 2019년 7월 최초 시도한 농민수당도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라도는 우리나라 고난의 역사 한 가운데에서 아픔을 깊이 느꼈으며 그 대행진에 매진하고 있

'전남인' 도올

첫 인연을 맺은 뒤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는데, 최근에는 '농촌 개혁 체험을 통해 특이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전라도의 잠재적인 역량을 21세기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남도의 지역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극찬하면서, 농촌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는 전남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동서양사를 통찰하며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철학자·교육자·작가·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농촌 사수'를 자신의 마지막 남은 역할이라고까지 했다.

를 도올TV에 초청해 대담했는데, 여기에서도 주제는 농촌이었다. 이 후보와 도올은 '소멸 농촌·지방'과 '과밀 도시·수도권'의 해법은 농촌·지방에 대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했다. 도시는 끝없이 농촌을 잠식해 가고 있다. 수도권은 한없이 지방에서 인구·자본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농촌과 지방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 말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도올은 "생명의 조건은 자연이며 어떠한 산업적 발전도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